

## 정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하여 (Ⅱ)



박상원 / 본지 발행인  
경제학박사/CBS 객원해설위원

지난호에도 정부의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다시한 번 언급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부의 경제양극화 대책은 잘못됐다라는 것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향후에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 격차, 글로벌 기업과 내수 기업간의 수익성 차이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경기 순환론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47%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와 중국 등 BRICs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이며 주요 선진국들조차 고실업과 양극화로 고민하고 있다.

국내 경제 양극화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우리경제의 만병의 근원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과소 평가한 면이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격보다 20~30% 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다. 중국은



1996년이래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2004년엔 606억 달러가 유입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본 유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4년에는 20~25\$ 정도였지만 2005년엔 50\$ 이상 상승, 현재 60\$에 다시 육박하고 있고, 60~7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2002~2003년 기간동안 중국의 엄청난 수요로 인해 철근,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중국이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LCD, 핸드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정유·은행 등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라이선스 산업 분야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LG정유, SK정유 등의 과점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내수에 중점을 둔 결과 호황을 누리고 있음. KT, SK Telecom 등의 정보통신기업들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활황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의류·섬유·화학·일반기계 등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87%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비중은 13% 정도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87% 정도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현재 초토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중국의 영향을 고려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대안으로 삼고 있으나, 사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더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산업이 발

달된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의 평균적인 지적수준과 교육 · 훈련 및 규율이 우리나라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나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잉과 경쟁격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수입의 근간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제조업 기반하에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경제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조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의 기본은 투자이며,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 순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투자의 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5~10%

의 투가증가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LG 필립스, 삼성 전자 등 주요 전자기업에서 LCD 라인을 증설하는데 거액이 투입된 결과 3~5% 투자가 증대된 것일 뿐이다.

또한 투자된 자본재가 대부분 국산이 아닌 일본제품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요인으로 가격인하가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의 사양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등의 구조적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이후 급격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수가 너무 늘어나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경총은 '차별'은 폐지하고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90%가 300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0~50명인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모두 보호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접근하기보다는 More Job의 개념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둘째,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사회적 갈등 축소이다. 2006년도에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 인한 외부적 충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임금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시장(해고, 임금조정)의 유연성 제고야말로 고용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호 차원에서 임금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고율 임금 인상으로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동결 등 강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투자유치이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이외의 투자지역 중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모방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이전은 기피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훈련이 잘된 근로자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조합의 극심한 파업이다. 현 노사관계는 과거에 비해 파업건수, 손실일수 자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질적인 관계는 알 수 없

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 선진화 법안 등 입법과정에서 노동단체와 경제단체와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높은 이전비용과 중국과 대만의 불안정한 관계, 한국의 노조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일이다.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는 기업을 살려보자는 분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외부에서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안정, 그리고 신규 투자 확대라는 대 명제에 노사가 함께 합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성장정책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을 쓸 때 증세 위주의 재분배정책을 쓰면 첫째,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여 중산층이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며, 둘째,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셋째,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저해할 것이며, 넷째, 개방된 국제경제환경에서 장기적인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을수 있다. ●